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세 번째 이야기

민선6기 문화정책과 사업을 논(論)하다

- 일시 : 2017년 12월 20일 (수) 오후 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 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윤상원기념사업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전통문화회 얼쑤극단 연인 광주미당 오월어머니집 광주장애인미술협회 대동문화재단 (사)청년문화허브 광주청년문화의집 파크인터네셔널 와사비 (주)엔덤 문화기획단 유별라 (협)코끼리 (주)나미야 (주)휴이컴퍼니 (주)엘리파이브 디자인컴퍼니 바비샤인 동네줌인 (협)플리마코 (주)쉐어하우스공명 (주)있다 (주)툄아이피 1%공작소 문화놀이터 가을 (협)아모틱 에포케 (주)청년미래전략센터 문화공동체 한판
- 후원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사 회 : 한 선(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원)
지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민곤(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김윤기(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 송영은(광주예총 사무처장) ▪ 원광연(광주연극협회 부회장) ▪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이정현(1%공작소 대표)

■ 목 차

1. 발 표 (1)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05
2. 지정토론(1)	정민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27
3. 지정토론(1)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41
4. 토 론 (1)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1
5. 토 론 (2)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55
6. 토 론 (3)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61
7. 토 론 (4)	원광연 광주연극협회 부회장	65
8. 토 론 (5)	이정현 1%공작소 대표	69
9. 토 론 (6)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	73

발표문 :

**민선6기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돌아보며**

박 경 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민선6기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돌아보며

박 경 섭 (전남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목 차 ...

1. 평가의 방향: 기준과 지표

- 1) 평가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 민선 6기 광주시의 시정목표와 공약 및 사업에 대한 간략한 진단
- 3) 민선 6기 후반기 문화정책 방향
- 4) 2016년 민선 6기 문화정책 평가에서 시민사회의 요구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광주의 문화정책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연구 중간보고
- 2)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라운드테이블(문화분야) 논의내용

3.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정책 평가

- 1) 문화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 2) 지역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대한 평가
- 3)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역할

4. 광주 문화정책의 전망과 방향

- 광주시는 민선 6기 '시민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시정운영에 시민 참여 확대,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가치 중심 행정 표방. 이를 위해 시민의 직접 참여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풀고 풀뿌리 자치공동체 조성을 주요과제로 추진. 신설된 참여혁신단을 통해 협치의 관점에서 마을 중심 공동체 정책 확대(<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 개막토론회 자료집: 23-24쪽)
- 광주형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 인권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
- 하지만 광주의 문화 영역에서는 민선 6기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며,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콘텐츠 부재(<광주일보> 2017.11.23.). 이는 광주시 문화정책에서 중핵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 문화재정의 한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꿈꾸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민선 6기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의 생산과 실천이 필요

1. 평가의 방향: 기준과 지표

1) 평가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과 행정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문화권, 문화 다양성, 문화 민주주의로 제시될 수 있음

- 문화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개정 2017.11.28.>

⇒ 민선 6기 동안 시민의 문화권은 얼마나 신장되었으며 문화권이라는 목표와 원칙은 문화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민선 6기 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증진되었는가?

- 문화 민주주의

-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 활동에서 자유로운 개인적 선택을 강조하기에 문화예술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들이 등장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구조나 정보 배분에 초점

- 문화 민주주의는 기존 문화적 공공영역의 전문가주의와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 참여민주주의적인 문화적 공공영역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
 - 문화 민주주의에서 소비자, 향유자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의 환경 조성
- ⇒ 민선 6기 문화정책과 행정에서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제도적 혁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사와 운영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실천되고 확장되었는가?

2) 민선 6기 광주시의 시정목표와 공약 및 사업에 대한 간략한 진단



<민선 6기 시정방향과 목표>

- 문화 관련 공약
 - 문화 공약은 문화민주주의 선도 도시 조성,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인 창작지원, 관광, 생활체육 부문으로 나뉠 수 있음
- 문화민주주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으며 실행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지는 미지수
 - 문화거버넌스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 반영 여부나 효과성은 평가가 필요

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이행도	추진부서	상세보기
6-1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				
6-1-1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	완료	문화도시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6-1-2	문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이행 후 계속 추진	문화도시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6-1-3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 조성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견인과 연계 강화				
6-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가시화	정상추진	문화도시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6-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강화	이행 후 계속 추진	문화도시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6-2-3	문화교류팀 신설	완료	정책기획관실	공약상세보기
6-3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산업육성				
6-3-1	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지역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문화도시정책관실, 문화산업과	공약상세보기
6-3-2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충장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정상추진	문화도시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공약 추진 경과. 광주광역시 누리집(2017.12.04.)>

-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조성은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은 현재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대 문화권으로 정비하여 단계적 추진 모색 중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포럼 지원은 확대되어 각종 포럼 개최, 활발하게 활동 중

●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6-4 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6-4-1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정상추진	문화산업과	공약상세보기
6-4-2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미래산업정책관실	공약상세보기
6-4-3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문화산업과	공약상세보기

- 국책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 중. 클러스터는 다양한 콘텐츠의 집적이 아니라 핵심콘텐츠의 연관분야의 집적이어야 함.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은 유행을 쫓을 필요가 없고, 애니메이션, 게임, 웹, 음악,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망라할 수 없기에 광주의 산업적 특성이나 문화적 역량에 걸맞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한 두 개의 핵심콘텐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창작지원

6-6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6-6-1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정상추진	문화도시정책관	공약상세보기
6-6-2	문화메세나 운동 전개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6-3	예술인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정상추진	문화도시정책관	공약상세보기
6-6-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6-5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7 전통문화 예술 지원 강화				
6-7-1	예향에 걸맞는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7-2	전통문화의 산실	이행 후 계속 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6-7-3	전통문화예술 DB 구축 및 콘텐츠 발굴	이행 후 계속 추진	문화예술진흥과	공약상세보기

- 예술인 창작지원은 문화 정책의 기본 분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창작환경과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나뉠 수 있음. 민선 6기 동안 이전과 다른 차별되고 혁신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 이는 직접 지원이나 행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술생태계나 예술시장과 관련된 창작환경과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임

●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6-5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				
6-5-1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6-5-2	아시아문화전당권 융합형 청년문화공간 조성	정상추진	문화예술진흥과	

- 현재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며, 장기지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평가 필요. 융합형 청년문화공간 조성은 2016년 10월 광주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었으나 아직은 청년예술인 중심으로 운영 중
-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기획자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독립 기획자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조선대학교 문화대학원 등에서 기획자들이 배출됨에도 문화

예술 관련 기관 취업 이외에는 다른 일자리는 많지 않고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하게 됨. 공모 사업으로 먹고사는 '업자화' 된 기획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 축제와 이벤트

- **프린지 페스티벌:** 올해 투입된 예산이 15억이고 내년에는 증액될 예정. 시민 만족도는 높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저평가. 이벤트성, 소모성 축제라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문화예술생태계와 연결되어야 하며 '브리지마켓', '예술인 행동, 場'과 협력 및 상생 방안 필요
-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연간 방문객 30만 명이 넘는 광주의 대표적인 야시장으로 알려짐(격주 실행 2015년 방문객 30만, 매주 실행 2016년 방문객 33만).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먹장'(먹고 마시는 시장), 예술 없는 예술시장, 점점 매력과 색깔이 없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는 2018년 10년째 접어들기에 향후 방향과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문화 관련 예산

- (총규모) 규모는 4조 398억원으로 '16년도 보다 207억원(△0.5%)이 감소하였으며, 6대 광역시중 4위 수준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16년도 보다 0.6%p 감소한 40.7%로 6대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
- 세출현황: 세출규모 4조 398억원중 사회복지 비중은 36.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9.8%, 수송 및 교통 9.4%, 환경보호 7.8%, 교육은 6.9%, '문화 및 관광'은 5.08%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예산액(2017)		전년도(2016)		증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40,398	100.00	40,605	100.0	△207	△0.51	
010 일반공공행정	39,878	9.85	5,740	14.1	△1,788	△31.01	
020 공공질서및안전	1,757	4.35	1,541	3.8	216	14.02	
050 교육	2,767	6.85	2,798	6.9	△31	△1.07	
060 문화및관광	2,052	5.08	1,815	4.5	247	13.67	
문화예술	1,065	2.64	911	2.2	171	19.11	
관광	112	0.28	149	0.4	△37	△24.94	

구분	예산액(2017)		전년도(2016)		증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체육	758	1.88	666	1.6	92	13.88	
문화재	80	0.20	56	0.1	17	27.79	
문화및관광일반	36	0.09	33	0.1	3	9.72	

- 문화관련 예산에서 큰 폭의 증가나 감소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 편성의 재배치나 중점 과제나 역점 과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및 투자 전략 필요
- 특히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축제, 문화예술생태계의 건전성을 해치는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해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함

3) 민선 6기 하반기 문화정책 방향¹⁾

-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의 상설 배치로 매력적인 문화공동체 구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 선도
- 민선6기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시에서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있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도시를 권역별로 특화하여 문화예술이 상설로 넘쳐나는 문화정책을 펼칠 계획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양림동~푸른길 구간을 이어서 누구나 걷고 싶은 매력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프린지페스티벌 등을 통해 세계의 문화가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
- 중외공원 주변은 광주비엔날레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시민들의 생활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특성화
-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남도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광주민예총이 주최한 2016년 7월 6일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자료집 31쪽 참조.

- 정통적인 문화예술의 공급과 교육, 향유 등의 문화예술정책 육성
- 2015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먹거리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문화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권과 송암산단권을 연계한 문화산업정책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

4) 2016년 민선 6기 문화정책 평가에서 시민사회의 요구²⁾

- 문화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 도시계획과 문화 관련 법령, 중장기 계획, 재정, 민선 6기의 혁신 행정(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참여예산제 등)과 협동하는 장치 필요. 일부에서는 문화부시장 직의 신설을 제안
- 인사 혁신: 개방형 공직제의 확대. 개방형 공직제의 확대가 항상 행정의 혁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행정 분야 공무원의 순환형 근무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일 수 있음. 개방형 공직제에 대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인사로 인한 잡음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음. 이 문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있음
- 제도 혁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실천적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야 함. 자율성과 독립성은 단순히 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님. 비엔날레재단이 보여주듯이 재정적 독립이 기관의 시민참여에 의한 운영과 직결되는 것도 아님. 독립성의 확대가 단순히 효율성과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정립되어서는 안 됨. 공공성을 강조하고 시와는 수평적 관계를 맺고 시민들과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함. 이러한 요구는 지역사회의 비엔날레의 혁신 요구와 관련됨

2) 2016년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자료집 24-25쪽 참조.

- 정책 생산: 문화 분권 측면에서 민간 정책 생산 기구 및 인력 양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연구원의 위상과는 다른 민간 단위의 정책 생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정책 생산 및 아젠다 설정 능력이 배양되는 것은 아님
- 문화 관련 거버넌스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해서 시민 참여 활성화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거버넌스가 단순히 의견 청취 및 사업 정당화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 프로세스와 결합되어야 함
- 위의 제안과 요구사항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광주의 문화정책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간보고³⁾

- 조성사업 비활성화 원인 분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 격하
 - 중앙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격하에 따른 추진동력 미비
 - 조성사업이 문화전당건립에만 집중되어 나머지 주요사업추진의 정체
 - 문화전당이 건립되었지만 운영의 비활성화로 인한 도시전체의 파급효과 미미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역할의 유명 무실화
 - <활성화 및 발전 방향>
 -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조성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추진단의 위상 확보
 - 문화전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성위원회의 역할 복원 및 조성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중앙정부 협력체계 구축
- ⇒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검토 필요

3) 2017년 10월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광주전남기자협회 주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자료집 참조하여 정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활성화 원인 분석

-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전당사업 운영 전략의 미비
- 전문인력 부족
-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이원화된 사업 추진체제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미미한 역할

<활성화 및 발전 방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전당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전문인력 확보
 -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적인 운영체계 마련
 - 중장기적 활성화/발전 계획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문화콘텐츠 개발
 -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의 비전을 구현 할 국제문화교류기관으로서의 위상 마련
 - 지역과 함께 하는 전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립
- ⇒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하나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의 현재 운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전당의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법인 위탁)인지 판단 필요. 더불어 국립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사례들도 검토해야 함

● 7대 문화권 비활성화 원인 분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치중되어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효성 있는 사업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향후 방향>

-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및 방향 확립
 -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실현 불가능한 사업 제외와 핵심사업 발굴
 - 중앙/지방정부의 사업비 확보
- ⇒ 7대 문화권 사업이 실효성과 효율성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핵심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7대 문화권 사업은 단위 사업들의 결합이 아니라 전당과 연계하여 광주의 도시공간과 일상을 바꾸는 문화도시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임

2)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라운드테이블(문화 분야)⁴⁾ 논의 내용

- 의제: '5·18 원형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 80년 당시로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렵고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광주시,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원형복원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님(아니어야 함)
 - 80년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이 가능한지 의문
 - 복원 목표, 원칙, 복원 후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또한 복원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함
 - 원형 복원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의 5·18에 대한 무관심이 극복되거나 5·18 정신이 계승되는 것은 아님
 - 구 도청 복원 주장에 담긴 가치와 지향은 공감하나 전당과 분리 주장은 전당의 정체성과 민주평화교류원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한 것. 원형 복원과 민주평화교류원이 조화를 이뤄야
 - 복원의 필요성, 범위,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복원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과정이자 5·18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장이 되어야 함
 - 원형 복원에서 다양한 목소리, 생산적 논의 부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우려
 - 원형 복원에 미래 세대 참여 필요
 - 옛 전남도청 일원에 대한 종합 대책에 기초해 문화전당과 조화를 이뤄야

- 전당 활성화 방안

“광주와 시민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광주와 시민들이 있는 것 같다”

 - 전당의 문제점: 전문인력 확충, 자체 창·제작 콘텐츠 부실할뿐더러 전시와 공연 위주,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 구조, 광주와 전당의 단절, 추진위의 위상 격하와 조성위의 유명무실화 / 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어려운 현대예술 위주의 전시와 공연. 전당의 공연과 전시는 지역문화예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지역 시혜성 사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당이 예술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연간 방문객 목표 수립해야

4) 필자가 참여한 3회(1차 토론회-2017.11.10., 2차 토론회-2017.11.15., 3차 토론회-2017.11.29.)의 라운드테이블에 제출된 토론문을 중심으로 정리.

- 전당이 세련된 예술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됨. 지금 전당은 '문화' 전당이 아니라 '예술' 전당. 시민의 일상과 지역을 바꾸는 것과 전당 정상화는 별개가 아님
 - 전당과 지역의 협치 체제와 협력적 운영 필요불가결
 - 구 도청 원형복원은 전당 활성화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지상의 5·18을 지하로 확장
 - 전당에 도보로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방법, 지하광장 접근성 높이는 방법, 전당과 광장과 금남로를 5·18과 인권을 테마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
 - 시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프린지페스티벌을 거론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서 광주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나 사업 없어
 - 조성사업 비활성화의 원인으로 국가나 정권 책임론에서 벗어나 광주시와 자치구는 그동안 간과한 것은 없는지,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 지역이 선도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 문화전당과 지역문화예술 상생
 - 지역 특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역 할당은 바람직하지 않음. 굳이 '지역'을 명시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음
 -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광주 시민이 전시회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필요. 예술 유통과 시장 구성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
 - 지역과 전당의 끊임없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문화가 전당에 경도되는 상황 경계해야 함
 - 전당의 공연과 전시, 관람 및 체험 콘텐츠가 지역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지역 예술인이 전당을 비판하고 참여만 요구하다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함. 전당은 시민과 지역예술인을 수혜와 공모, 참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광주와 전당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과 기획 필요하며 전당은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조성되는데 기여해야 함
 - 문화전당 활성화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해서 대중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 금남로/충장로 민주광장과 문화전당, 동명동/양림동을 연결하는 동선 필요

3.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정책 평가

- 지역문화컨설팅 '광주예술 백인보'(문화체육관광부·광주문화재단)⁵⁾는 예술가의 생애경험에 대한 구술조사(심층면담), 구체적 맥락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정책 수립하는 사업(기간: 2017.3 ~ 2017.12)

장르	공연				시각			문학		기획
	무용	연극	음악	다원	미디어	사진영상	미술	소설	시	
참여인원	6	11	15	3	5	7	18	9	6	20
100명	35				30			15		20

<인터뷰 참여자 개요>

- 아래의 내용은 '광주예술 백인보' 사업에 참여한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

1) 문화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 공모 사업 행정 절차와 회계와 정산 시스템
 - 지원신청과정에서의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행정 문서 처리 어려워
 - 대부분의 작가들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경우 교육과 간담회 참여 등의 요구사항들이 많고 특히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오류 때문에 어렵다고 응답
 - 지원 사업이 해가 바뀌면 지침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힘듦. 보완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e-나라도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다시 역행
 - 중앙부처의 회계는 'e-나라도움'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 재단에서 또 한 번의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서류가 간소화되고 있는 현재 서류와는 맞지 않음
- 지원의 일회성과 소액 예산 지원
 - 지원할 때 인건비, 제작비가 반드시 필요한 돈이지만, 일회성에 가까움. 그 지원으로 제작해서 공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체가 그 공연에서 끝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공연을 해년마다 올릴 수는 없음

5) 필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주의 문화예술인 100인의 인터뷰의 전반적인 분석 내용은 2017년 12월 5일 개최된 <광주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포럼>의 자료집을 참조할 것.

- 피드백을 통해 다음 해 더 나은 공연물로 진화시키고 싶은 생각을 극단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1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마는 상황이 반복
 - 예산이 너무 소액이어서 공연을 시작하는 동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연출비, 대본비, 개런티가 제대로 지급될 수 없어 작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짐
 -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적은 비용을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부족한 비용으로 작품의 질의 높아지기를 기대함
 - 기금을 받아서 퀄리티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으나 전시를 만들기에는 지원비용이 턱없이 부족
- ⇒ 콘텐츠의 생산, 유통, 품질 향상까지 고려한 장기적, 지속적 지원 사업 도입

● 지원 방식

- 나눠주기 식, 쪼개주기, 장르 편향적 지원은 미봉책으로 현장 문화예술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장르의 특성에 따라 공연 준비 소요 비용이 다른데,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
 - 정책의 시각이 행정 편의로 되어 있음.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신들의 방향으로 단체의 기획을 짜 맞춰야 하거나, 기준이 전혀 없음
 - 공모 및 지원 사업 선정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필요. 지속적으로 받는 팀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로 들어가는 예술가들의 경우 지원받기가 어려움
 -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이 축소되더라도 공연내용을 수정하기 어렵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예산 집행에 어려움. 계획의 변경과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수정과 조정 필요
 - 획일화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아닌 장르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 ⇒ 장르 특성, 세대, 단체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성과물 중심, 보여주기 식 사업

- 예술의 결과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과 결과물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
-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원함

- 결과물 중심의 지원은 작가정신이 녹아있는 창의적인 작품보다는 보기에
는 좋지만 질 낮은 결과물 창작을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공연활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모두 결과물 중심임. 하나의 공연물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획, 연습, 유통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
지원사업 예산은 모두 공연에 올렸을 때, 대관료, 개런티, 무대제작 및 소
품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올리기 직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
용은 온전히 극단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

⇒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 지원 사업의 폐해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 광주에서 민간영역의 예술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 단체들
이나 예술가 개인의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 이런 일방적인 공적지원은 자칫하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음
-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범주를 벗어난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를 찾아
보기가 힘들어짐.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는 지원 사업 없이 공연을 만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됨
- 지원이 없을 때보다는 예술가들의 생활의 질은 향상된 점이 있지만 예술
가들의 의식 자체가 노예화
- 지원 사업 자체가 예술가들로 하여금 의존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괴
감을 들게 함. 지금 예술 관련 사업과 정책은 공모 지원과 정산이 전부인
상태. 장년층의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은 프로젝트를 따라다니면 장사꾼처
럼 되고 있음

⇒ 지원사업 의존성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기반 조성 필요

2) 지역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대한 평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지역보다는 먼저 국립기관이며 국가사업으로 생각함. 화려한 융복합의 규
모 있는 공연 또는 유명 국내외 예술가들을 선호함. 지역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광주에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음. 지역예술가들에
게 열려있다고 하나 거의 소통이 없음. 전당 스스로 국립기관이며 국가사
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현재 '섬'이 되어 버렸음. ACC의 기획자를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방식에서의 갑질은 중단되어야 함

- 프린지페스티벌
 - 목적을 알 수 없는 행사. 단순한 행사 참여로 단체의 예술적 방향까지 흐리게 함. 단순한 행사 참여로 지역 예술가를 소비하려는 것이 문제

- 광주비엔날레
 - 외부에서 총감독을 영입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 예술을 등한시 하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 광주의 정체성과 고유성과 결합한 차별화가 부족해서 여타 비엔날레와 유사. 광주 예술에 대한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지역과 수평적 협력 모색해야

- 대인시장프로젝트
 - 지역 예술가들은 더 이상 대인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대인예술시장에 대해서는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예술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 표명. 예술시장이 아니라 먹고 노는 시장이 되었고 팔리는 수제품들도 특색이 사라짐

3)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역할

- 사업과 제도 개선
 - 지원 방식의 세분화 : 장르와 단체의 특성이 있는데, 현재는 똑같이 배분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임. 각 장르별 단체별 조사를 철저히 해 지원 방식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함
 - 공모와 정산의 간소화 :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과 창작에 집중해야 하는데 회계와 정산으로 시간을 소비함

-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 전문성 필요: 예술마다 각기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담당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단체들도 제출해야 할 행정 절차 등이 바뀌게 됨
 -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특히 기획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하여 기획비에 대한 산정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

● 사업 방식과 정책 혁신

- 혁신적 공적 지원 사업 필요: 예술가들이 흥미를 가질만큼 혁신적이고 창의적 정책 필요. 작가를 홍보하고 성장시키는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러한 공적 지원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
- 지원은 하되 적극적인 역할을 삼가야 함. 행정과 제도와 틀이 앞서게 되면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의 사라짐. 틀과 규칙을 만들고 사업에 지원하라는 식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즐겁게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혁신적 행정 시스템 필요

●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가들의 위상을 높여서 일반시민들이 예술의 영향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함
-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수준이 예술의 수준을 결정. 작품과 공연이 소비되는 예술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적인 구매자가 작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지원
- 창작지원 단계를 넘어서 예술가와 단체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예술가와 단체들이 기업이나 다른 기관과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함. 기업, 전문가, 예술가의 매칭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

- 지역 예술가와 기획자 육성 :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공공성은 예산 배분의 평등이 필요하겠지만 소수의 역량 있는 예술가에 집중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지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기획자를 발굴해야 함
- 신진 단체 육성: 성과위주의 지원사업 선정으로 큰 단체들에 지원이 집중되고, 신진 단체들이 클 수 없는 구조

●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특색, 정체성이 반영된 콘텐츠 제작 : 광주가 가진 전통 문화, 민주화 운동 자산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해 나아가야 함

4. 광주 문화정책의 전망과 방향

- 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정책 필요
 -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화의 생산과 예술의 생성의 기반에 대한 성찰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 문화예술시장에 예술 작품과 문화상품이 적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소비가 부진한 것이 문제. 많이 팔리는 작품이나 상품이 작품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질은 소비의 필수 조건
 - 문화산업은 예술 작품과 문화상품과 생산과 소비가 맞물리는 문화예술시장을 전제로 작동. 따라서 문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는 창작활동 환경 조성 and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함. 소비 측면에서는 향유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향유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 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과 문화경제와 문화산업의 토양이자 기초인 예술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지원 정책과 사업의 점검과 전환
 - 그동안 소액 다건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경쟁적 공모 사업을 넘어서는 전환적 정책 개발 필요
 -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상품과 콘텐츠 기획·개발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비 지원 정책 도입
 - 용역 과정에서 재하청으로 인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실제로 일한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음.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다시 도입하거나 지역의 문화산업 종사하는 기업, 콘텐츠 생산 단체들이 타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개선책 필요

- 문화 민주주의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견지하는 '현장' 중심의 수평 행정 필요
 -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문화정책과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토로의 이면을 살펴보면 문서 중심 행정, 규정과 원칙에 대한 유연하지 않은 해석과 집행, 행정과 예술인 간의 파트너십과 신뢰의 결핍이 존재

- 광주시와 문화예술 관련 공공 기관의 종사자들이 문화예술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나 프로그램 필요
- 장르 간, 지역 간, 세대 간 교류는 융·복합을 통한 문화예술 혁신의 기초
 - 전당의 핵심 기능은 교류. 광주와 아시아의 교류를 통해 전당을 개방해야 함. 전당은 어렵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사대주의적 발상을 중단하고, 좋은 콘텐츠를 스스로 창작하고 제작하겠다는 욕심을 줄여서 유능한 콘텐츠 제작자, 기획자가 전당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전당을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을 아시아로 내보내고, 아시아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을 광주로 불러들여 광주를 포함한 남도를 고민하고 연구하게 해야 함
 - 최근의 문화예술계의 트렌드는 다양한 장르의 협력 작업. 레지던시 사업을 시각예술 분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들을 지원하고 다장르 융합이 가능한 레지던시나 공동 창작공간, 공동 작업장 건립과 지원 필요
 - 다장르 복합 공간, 공동 작업장 구성과 운영을 통해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원칙이 구현되는 장(場)으로 만들어 작업장 문화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옛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전당 활성화는 호혜적 관계임. 전당은 지역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5·18 또한 전당과 함께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기억되어야 함
 - 옛 전남도청의 모든 공간(현재 전시콘텐츠 설치 부분 포함)을 개방하고 많은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지성으로 복원 논의를 진전시켜야 함
 -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은 소수의 관계자, 행정, 전문가의 결정이 아니라 일종의 공론장이 되어야 하며 5·18정신의 상징인 구 도청을 광주와 전 국민의 마음속에서 다시 짓는 작업
 - 광주시 도시공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성과인 '푸른길'을 연장하여 전당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전당을 둘러싸서 섬으로 만들고 있는 도로를 변형하여 보행자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양성의 증진(소수의 독립 문화, 인디 문화 등)은 문화발전의 토양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기관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양성증진센터를 건립하되 다양한 독립 문화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운영

지정토론문 :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
주요성과와 반성**

정 민 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 주요성과와 반성

정 민 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민선6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 광주는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이라는 대선공약이 도출되고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차별정책이 낳은 블랙리스트 사태 등 적폐가 청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도의 맛·멋·흥이 어우러진 '꿈꾸는 문화도시」를 시정목표로 삼아 출범한 민선6기 광주의 문화정책을 되짚어 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민선6기 문화정책 성과와 반성 (대안)

1. 시민의 문화권 보장

(성과) 매주 토요일에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아트피크닉을 문화전당 주변과 중외공원 등 시 전역에서 개최하고 100여개 동아리와 76개 생활예술 활동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하고 미술대전, 한국화대전, 국제아트페어 등을 통해 신인 미술작가를 발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실버 예술단, 천원의 낭만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였다.

(반성) 문화예술 관련 특정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에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등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문화다양성 보장

(성과) 금년 1월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위원회(위원장-행정부시장, 위원-16명 내외)」를 구성, 2018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5~8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市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안) 문화 전문가와 사회적 소수집단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문화다양성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문화 민주주의 보장

(성과)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운영 중인 *「광주문화기관협의회」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52회 개최('13 3회, '14년 8회, '15년 18회, '16년 18회, '17년 5회)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대안) 광주인권헌장에 명시된 문화분야 조항을「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으로 대체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관련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긴 선언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 , 비엔날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DJ센터, 문예회관, 시립미술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디자인센터, 아시아문화원, 광주전남연구원 등 12개 기관

4.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성과) 대선공약에「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이 포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사업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문체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통해 설립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5.8)하고 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16.11)되었으며 미래부 2017년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또한 첨단영상, 음악, 게임, 공예분야를 전략콘텐츠로 설정하여 광주를 이끌어 갈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안) 앞으로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의 정책적 의지를 결집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특히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

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창작>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공방 운영 등 → <제작>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게임 프로젝트 제작지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유통> ACE Fair,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핸드메이드 페어 등

5. 문화예술축제 육성 및 예술진흥기반 구축

(성과)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정율성 음악축제」와 한중 전통문화 교류,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전국 오월 창작가요제, 임방울 국악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광주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전문 문화예술가 창작 활성화와 시민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성) 전국적인 문화역량을 갖춘 문화 기획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족하여 각종 축제행사에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행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대학 내 문화예술 관련 학과와 연계한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6. 축제와 이벤트

(성과) 글로벌 문화행사로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금년 4월 22일 개막, 현재까지 26회 개최하여 3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40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에 개최한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은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와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리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안) 市·문화전당 상시 협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은 물론, 아시아 대표 브랜드 축제·이벤트로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가. 광주문화지표 조사결과 시사점 ('16. 10. 19 ~ 10. 31, 산학협력단)

- ①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② 자치구별 인구 수, 면적 대비 문화기반시설 편중도를 고려하여 부족 지역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경우 인구 수, 면적 대비 공공문화기반 시설 확대 필요)
- ③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지원이 대중문화예술에만 집중될 경우, 순수 문화예술의 소외와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문화예술 장르별 격차와 문화예술계 내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특정단체에 치중)
- ④ 문화산업 규모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노동의 특성상 프로젝트형 단기 노동이 다수)
- ⑤ 문화예술 인력은 고등교육기관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양성·배출되고 있으나, 자기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나. 청년문화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17. 8. 31 ~ 9. 15, 광주문화재단)

- ① 최근 청년문화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도전적·독립적·개인주의적 성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 전략이 필요함
- ② 응답자 대다수가 광주는 청년의 문화행사 참여가 활발하고 청년이 존중되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문화예술활동 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 SNS나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얻고 있으며,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어 맞춤형 문화예술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
- ④ 청년들에게 놀이·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⑤ 청년들의 정기적인 동호회 평균 회원수는 24명이며, 공간확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 ⑥ 광주 청년문화 정책 중 청년축제 개최를 가장 우수한 분야로 꼽았다.
- ⑦ 광주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청년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광주지역 예술인 실태조사결과 시사점 ('16.7 , 광주전남연구원)

- ① 예술계에 처음 입문한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장기 임대 지원 및 예술 장르별 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 ② 예술인 작품판매 . 유통을 위한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③ 신진 예술인들이 중견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지원시스템과 국내외 작품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
- ④ 문화예술 장르 간 장벽을 허무는 융복합 창작물 제작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과 예술인 경력을 고려한 공공영역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등 연계사업 발굴 필요)
- ⑤ 문화전당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 지역 예술인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상생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⑥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 영역을 특화시켜 멘토-멘티 시스템, 청년 예술인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⑦ 청년예술인 발굴과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 문화정책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문재인 대통령 약속사항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 7대 문화권 조성사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효 연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기간 연장

가. 추진배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2015년 11월에 문화전당만 개관하여 현재까지 정식 전당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해 오고, 조성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13년째 표류하고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이 제시되었고 지난 5월부터 꾸려진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문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 등 노력을 기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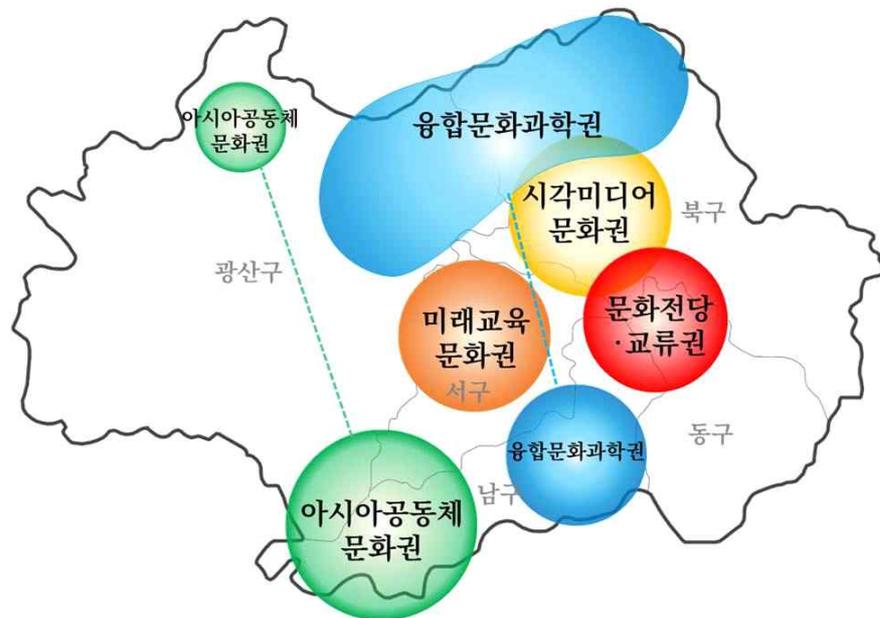
나. 지역사회 요구사항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아특회계)」를 설치하여 시비와 50% 매칭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48조 규정과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2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 의지로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
- ② 문화전당 개관이 당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5년이 지연된 만큼 특별법 부칙 개정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시효기한을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고 문체부 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

- ③ 지역 문화계 여론을 반영한 문화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문화전당 활성화 사업이 본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7대 문화권을 현실적으로 개편한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문체부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 최종 보고회 결과 ('17. 12. 8)

- 5대 문화권으로 개편 /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가. 5대 문화권 개편 당위성

- ① 기존 7대 문화권 사업은 다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 ② 市 차원의 주요한 도시공간계획, 전략산업 추진과 결합력이 낮으며
- ③ 권역별 장소성 및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연관성이 낮아 권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
- ④ 또한, 7대 문화권을 주요개념과 기능별로 통합하게 되면 유사한 성격의 중복 사업을 줄여 문화권 사업의 목적성과 현실성 제고가 가능하므로
- ⑤ 5대 문화권역 단위로 1~2개의 핵심사업과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재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5대 문화권 개편 원칙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신뢰성·연속성 유지와 지역 간 문화자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7대 문화권 실행 구조를 유지했다.
- ② 변화된 문화지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문화-경제 등과 결합된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가치와 개념 중심으로 권역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관련 공간의 재조정했다.
- ③ 전체 도시의 문화적 순환 구조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자산과 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핵심거점뿐만 아니라 유사 성격의 다양한 기능적 공간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방식의 공간을 설정했다.
- ③ 지역의 문화공간과 문화활동을 넘어 문화교류와 연대의 관점에서 아시아성-전국성-지역성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의미를 창출했다.
- ④ 도시문화,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융복합콘텐츠, 사회혁신 등의 주요 영역과 가치를 고려해 새로운 인프라와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 ⑤ 조성사업의 이후 문화도시의 지속성 유지와 문화산업적 효과 창출, 미래세대의 문화역량 제고 등을 고려한 'Post-조성사업'을 대비한 미래적 관점의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 ⑥ 광주시가 미래도시계획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도시재생 등 도시공간 시책과 연결시켜 사업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제고했다.

다. 5대 문화권 개편에 따른 주요사업

7대 문화권 (2004년 당초계획)	7대 문화권 (*17. 7. 14, 중간보고회)	5대 문화권 (*17. 12. 8. 광주시 / 연구진 검토)
<p>① 문화전당권 (구도심 일대) -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 투자진흥지구 (전일빌딩) 지원시설 구축</p>	<p>① 문화전당권 (구도심 일대) · 도심 유스호스텔 조성 (신규) · 도시 근대역사관 조성 (신규)</p>	<p>① 문화전당·교류권 · 국립 근대미술관 조성 · 시민예술촌 조성 · 광주 근대역사 문화관 건립 · 아시아 정의로드 조성 · 도심 유스호스텔 건립 · 아시아 문화다양성 증진센터 설치 ·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p>
<p>② 아시아문화교류권 (남구 양림동 일대)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 양림역사문화마을 조성 - 광주음악창작소 조성</p>	<p>② 문화교류권 (, 광산구 추가) · 아시아문화교류센터 설치 (신규) · 시민예술촌 조성 (신규) · 아시아 문화원 유치 (신규) · 아시아 미디어스퀘어 조성 (기존)</p>	<p>② 아시아융합문화과학권 · 한국문화기술 (CT) 연구원 설립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광아트 창의산업 육성 · 융합과학 Industry valley 조성</p>
<p>③ 아시아신과학권 (광산구 비아동 일대) - 산업단지 아트 팩토리</p>	<p>③ 아시아융합과학권 (R&D특구, 송암·하남·소촌산단 추가) · 광아트 창의산업 육성 (기존) · industry valley 조성 (기존) · 운영 활성화 (신규)</p>	<p>③ 아시아공동체문화권 · 아시아 줄문화 축제 개최 · 공동체·전승문화기반 교류 및 체험사업 · 아시아 전승문화 기술센터 설치 · 수공예 테마파크 Asia Craft City</p>
<p>④ 아시아전승문화권 (칠석·대촌·효천 일대) -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 고싸움 놀이 축제</p>	<p>④ 아시아전승문화권 (편백림, 포흥사 추가) · 아시아 전승놀이 테마파크 (기존) · 아시아 전승문화 기술센터 (신규) · 아시아 줄문화 축제 (신규)</p>	<p>※ 기반조성 사업의 기본철학으로 5대 권역의 특성에 맞춰 분산 수용</p>
<p>⑤ ·생태환경보존권 (무등산, 영산강, 광주호 일대) - 전통문화관 건립 - 풍류남도나들이 - 무등산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p>	<p>⑤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 · 문화생태 잇다길 조성 (기존) · &시가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기존+신규) · 복합문화생태 테마파크 (신규) · 문화생태경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존+신규)</p>	<p>④ 미래교육문화권 · 상상파빌리온 조성 · 에듀파크 조성 · 에듀컬처 시범학교 및 에듀타운 조성</p>
<p>⑥ 교육문화권 (서구 마록동 일대)</p>	<p>⑥ 미래교육문화권 (마록동 일대) · 상상파빌리온 조성 (신규) · 에듀파크 조성(기존) 및 비전화공방 운영(신규) · 및 에듀타운 조성 (기존)</p>	<p>⑤ 시각미디어문화권 ·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現, 주차장 부지) · 광주 국제창작스튜디오 조성 (現,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활용)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市 교육청 사업) · 국제 빛-예술축제 개최</p>
<p>⑦ 시각미디어문화권 (중외공원 일대) -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p>	<p>⑦ 시각미디어문화권 (중외공원 일대) · 중외종합예술공원 (기존) · 국제타운 조성 (신규) · 국제창작공간 네트워크 추진 (신규) · 광주비엔날레 및 디자인비엔날레 (신규) · 국제 빛-예술축제 (신규) · 전문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 (신규)</p>	

Ⅲ. 광주 문화정책의 전망과 방향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가. 아특별 시효연장 ('26년 → '31년)과 사업기간 연장 ('23년 → '28년)

- ① 5대 문화권역별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예상
- ②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기회 확대

나. 시민사회단체 여론을 반영한 문화전당장 선임

- ① 문화전당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 국내외 문화예술인, 지역대학 간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市 - 지역문화계 - 문화전당 간 선순환적 문화 예술 생태계 구축 기대(문화예술 분야 간 융복합 활성화 도모)
- ②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지자체 사업비 등 아특회계(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국책사업 / 지역사업 간 협력 강화
 -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월드뮤직 페스티벌 등

2.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축

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지속 추진

나. 지속가능한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문화포럼,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개최)

다.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 연대(CICA) 구축
(창의도시연대 광주선언, 도시별 성공사례 공유, 청년교류 활성화 등)

3.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활성화

가. 시민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토요문화학교 확대, 문화예술강사 파견,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 등)

나.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통한 문화평등주의 실현
(소외계층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4. 도서관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

5. 기업·개인과 문화예술 단체 간 결연유도(문화 메세나 운동)

6.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을 통한 전통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7.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 육성

가. 콘텐츠 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

(광주 스마트벤처 캠퍼스 . 광주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나. 광주 ACE Fair 개최로 문화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시장 개척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등 마케팅 지원)

8.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강화

가. 무등산 등 역사 . 생태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광주호 ~ 시가문화권 스토리텔링을 통한 탐방코스 운영 등)

나. 문화전당과 도심의 문화예술 . 역사자원 연계, 도심 도보관광 코스 운영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추진 / 2시간 이내 도보코스 개발)

9. 팔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문화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존중,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강화)

10. 문화예술 민 . 관 협의 플랫폼 구축

지정토론문 :

**광주문화의 든실한,
풍요로운 전망을 위하여**

김 윤 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문화의 든실한, 풍요로운 전망을 위하여

김 윤 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를,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한 시간을 아낄 수 있지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다리아 양을 꼭 만나야 한다면 두 주에 한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의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하엘 엔데, 『모모』, 91쪽)

- 효율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단적인 사례로 인간관계, 삶의 여유, 문화향유 자체를 시간 낭비로 보는 사례를 모모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이 우리 내부에도 있지 않을까? 문화를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문화의 궁극적 목표를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문화의 자율성은 이론적 이상인가?

1. '문화'개념의 위상변화와 민선6기 문화정책 방향

- 문화 개념의 위상변화
 - 1970~80년대 문화는 정치나 경제에 비해 부차적인 영역으로 간주됨. 1990년대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소비양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삶의 질과 여가 및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함.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환경 등의 핵심에 문화가 등장하고 지역주민의 통합,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문화를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킴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명명하며, 문화가 정치나 경제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사회와 지역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자원이자 동력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함

- 민선 6기 문화정책 방향과 평가
 - 민선 6기는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가치 중심 정책, 시민참여에 기반과 소통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문화권, 문화 다양성, 문화민주주의를 문화정책 키워드로 설정함
 - 민선 6기 문화정책은 문화를 사회발전의 자원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 구현되는 권리와 가치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 했고,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사료됨. 즉 문화정책에서 선도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념을 광주가 선언하고 이를 위한 실행과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발제문에 대한 보충의견

- 민선 6기 문화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
 - 민선 6기 문화 분야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발제에 제시된 공약추진 경과와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생각됨. 예를 들면 “예술인 창작지원에서 민선 6기 동안 이전과 다른 차별되고 혁신적인 지원을 찾아보기 힘들” 문화메세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구축, 문화협동조합 육성 등은 이전과 차별된 정책임.
 - “문화분권 측면에서 민간 정책 생산 기구 및 인력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발제자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 발제문은 조성사업, 전당, 7대 문화권의 비활성화 원인분석과 활성화 방향 등의 종합계획 수정 중간보고, 시민대토론회 등의 내용을 요약함.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국가차원, 지역차원, 전당내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체별로 쟁점별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쟁점에 따라 논의가 필요함.
 - “전당의 운영주체가 국가인지 민간인지 판단 필요”라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추가설명 궁금.
-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정책 평가
 - 광주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가 일종의 시민참여 확대 및 문화민주

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 됨. 물론 현장의 고민과 애환이 느껴지는 의견인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함.

- 그러나 현장의 요구와 불만이 곧 문화정책 평가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지원정책에서 지원금을 늘리라는 요구 vs 예술생태계를 위해 지원사업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 지침이 바뀌면 힘들다는 의견 vs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 등 사안에 따라 입장차이가 다양함.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정리해가는 것 자체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임. 즉 정책평가는 아님.
- 또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갖는 본원적 특성을 이해해야 함. 예컨대 보조금법,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예산규모, 정산회계시스템, 지원의 수월성과 혜택의 다양성 등의 다양한 요인과 그것을 수행 할 수 있는 실행 주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함. 또한 예술가들의 의견과 그에 따른 정책요구, 실행주체 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프린지 페스티벌 목적을 알 수 없는 행사. 단순한 행사 참여로 예술적 방향까지 흐리게 함. 단순한 행사 참여로 지역 예술가를 소비하려는 것이 문제” “대인시장프로젝트. 지역 예술가들은 더 이상 대인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음” 이러한 의견 또한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프린지페스티벌의 경우 일회성 축제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심형 거리축제를 단기간에 안착시켰다는 점, 특히 주말여가 활동이라는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기획이라는 점,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지역밀착력이 높은 시민참여를 끌어내어 문화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대인시장사업 역시 어찌되었건 7대 문화권을 대표하는 사업임. 전당건립을 제외하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연간 방문객이 30만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각론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총론에 대한 평가는 성과도 인정하며 냉정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광주 문화정책의 전망과 방향

- “문화예술인은 문화정책과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문서중심 행정, 규정과 원칙에 대한 유연하지 않은 해석과 집행, 행정과 예술인간의 파트너쉽과 신뢰의 결핍이 존재”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됨. 재단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CS교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다양성의 증진은 문화발전의 토양. 문화다양성 사업과 기관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매우 공감되는 내용임.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문화다양성 증진 캠페인, 고려인마을 협력사업, 난민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민선6기 문화정책 평가와 광주문화재단의 역할

○ 광주의 문화정체성 강화사업 발굴

- 발제문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민선 6기 들어 문화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있었음. 예컨대 지역문화진흥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민선 6기 제정된 조례는 광주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조례 등임. 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앞선 조치였음
- 또한 정책연구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함. 지역의 문화지형도를 그려 보고자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36,000천원, 시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000천원, 국·시비)를 실시하여 조례제정에 기여하였으며, 청년문화실태조사(45,000천원, 시비)를 실시하여 청년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60,000천원 국·시비)를 실행하여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민선 6기 들어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광주형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은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라 생각됨.
- 광주문화재단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문화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광주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초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발굴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임.

○ 프린지 페스티벌의 확장

- “시민의 만족도는 높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저평가”, “목적은 알 수 없는 행사, 단순한 행사 참여로 단체의 예술적 방향까지 흐리게 함. 단순한 행사 참여로 지역 예술가를 소비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작년부터 시작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전당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매개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기획
- 올해 4월 중순부터 매주 개최되면서 행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면서 기대이상의 성과와 함께 광장문화의 새로운 변신과 가능성 보여줌
- 거리예술의 새로운 장르의 개발 및 제작, 공연장의 장르를 광장과 거리로 이끌어내면서 거리예술화를 위한 시도는 부정적 관점 보다는 거리예술의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음
- 또한 올해 6월 초,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은 거리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해외의 거리극단과 국내의 대표적인 거리극단 20개를 초청해 50회 공연을 펼침
- 스페인 극단 <작사>의 '마법의 밤' 거리행진 퍼포먼스와 개막작인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보알라 정거장'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거리예술의 진수를 선보임
- 내년 3년째 프린지페스티벌은 5·18광장과 주변 공간의 연계 확대,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으로 확장, 광주형 프린지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창·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계 계획
 -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은 금남로, 5·18광장,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을 기본 축으로 활용하면서 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구별 홍보마케팅 도입 및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리극 프로그램 도입 예정⁶⁾
 - 예) 프랑스 극단 <제네릭 빠삐> '야영'⁷⁾, 폴란드 극단 <KTO>의 시간의 향기⁸⁾
-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국제적인 페스티벌의 공유점도출을 통해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의 컨셉 정초

6) 본질은 충분히 살리되 거리극을 통해 우리사회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생산적인 소통방식의 공연 작품 계획

7) 드럼통 30여개를 이동시키면서 금남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뒤흔들며 광주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표현을 보여줄 계획

8) 한 소년이 성장해가면서 겪은 왕따, 경쟁, 사랑, 전쟁 등을 거리극으로 표현

○ 문화예술 지원정책 제도개선

- 창작지원사업인 <지역협력형사업>에서 휴식년제 지속

논 의 내 용			
휴식년제	- 실시 연도 : 2016년		
	- 휴식년제 실시 사업 : 2017년도 지역협력형사업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사업(시비사업)은 제외		
	공연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4년연속(2014 ~ 2017년) 지원단체 1년 휴식	
	지역문화예 술훈성화 지원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4년연속(2014 ~ 2017년) 지원단체 1년 휴식
		지역특화 문화거점	4년연속(2014 ~ 2017년) 지원단체 1년휴식
문화예술 교류지원		4년연속(2014 ~ 2017년) 지원단체 1년 휴식 개인의 경우 1년(2017년) 지원 1년 휴식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단체의 경우 2년 연속 (2016 ~ 2017년) 지원단체 1년 휴식 개인의 경우 1년(2017년) 지원 1년 휴식	
현행 유지	- 생활문화예술 활동단체지원사업, 야외상설브랜드 창작지원사업 전액 시비 지원사업 현행 유지 / ※ 휴식년제 제외		
지원 건수	- 지역협력형사업 전체 세부사업에 대해 1년에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확산
 - 문화예술향유 확대 →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개인 및 단체지원 확대)
 - 생활문화 확산 → 동아리지원사업 단체지원 확대(100개 동아리에서 30% 확대)
 - 문화다양성 확산 → 국비공모사업+시비 확보 1억 확보(전국지자체 최초)
 - 사회문화예술교육 강화 → 청소년, 노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 문화예술 사회공헌 확대 → 소외계층 및 취약지구 대상 기획프로그램 마련
- 광주형 문화예술 지원체계 마련(2019~2023)
 - 2018년 공모사업 이후 정부 및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정책 기조 반영
 - 선순환적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및 장르, 대상, 영역을 고려한 지원체계 재구축

4. 결론

- 광주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시민의 시간과 삶이 응축되어 나타난 집적물임. 문화정책 또한 숙성이 필요함.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이 필요하고, 생산된 담론을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의 영역으로 실현하는 집행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공론을 모우는 과정에서 과잉된 담론의 속에 매몰되어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피로감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임. 그러다보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것이 광주의 역동성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공론으로 모아진 결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
-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 시민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높이는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광주 문화발전의 생산적 담론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임.

토 론 문

6기 광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토론문

김 광 옥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6기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으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잘못된 점을 반성해서 더 좋은 광주문화를 만들자는 선의가 자칫 민선 6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매도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민선 6기 문화정책 방향과 실천력에 대한 의견

-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가치 중심 정책, 시민 참여에 기반과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보편적 방향임. 문제는 이를 뒷받침한 실천력에 대한 문제임.
- 시민중심은 행정중심 혹은 권력중심에 대비되는 단어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최종적 결정에서 시민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함.
- 민선 6기 이전부터 시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는 물론이고 시민 대토론회 등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지만 결정적 순간에서는 제외되어 상대적 소외감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일으켰음.
- 현 간접 민주주의와 행정체계 내에서 모든 결정을 시민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음. 때론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다수 의견에 반하는 결과를 선택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시민 설득이나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신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 민선 6기 초기에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어떤 축제가 구조조정되었는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청년축제가 추가되었음. 이러한 과정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 오늘날 축제가 시민의 문화향유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광주시에 적절한 축제 수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2.

근거에 기반한 문화정책 추진은 아직도 요원한가?

- 민선 6기 사업 중 지역문화지표조사를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하고 싶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에 의해 문화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대부분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못해 일어나는데 지역문화지표조사는 2010년에 지표체계에 대한 연구만 시행하고 몇 년 간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 지표조사 하나로 많은 문화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음. 한 해에 하나씩만이라도 근거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 외 청년문화예술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조사 등 여러 조사들이 있었고,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예술 플랫폼도 개발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임. 민선 6기의 이러한 노력들은 화려한 실적보다는 중요한 주춧돌을 하나 둘씩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3. 타 지자체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문화지표는 양호한 수준

-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전국 수준으로 보면 구 단위에서 광주 동구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음. 이를 가지고 말이 많았으나 최소한 광주시를 깎아내릴 정도의 결과는 아님.
-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은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여 평가하였고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다보니 나온 문제임. (예산 구조상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산 비율은 광역시의 구 단위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음.)
- 광역시 자치구만 놓고 순위를 정리해 보면 상위 10개 자치구에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4곳이 들었음. 상위 10개 자치구는 부산 4곳, 그리고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가 각 1곳씩 이름을 올렸음. 부산의 자치구 수를 생각해 보면 광주광역시의 80%가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임. 이 자체만으로 광주시 문화행정을 모두 평가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광주시의 문화행정이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임.
- 이제 광주광역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방향을 좀 더 폭넓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국비확보 위주의 관 영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와 문화예술시장의 육성 등 민간 영역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 이를 관에서

추진하기는 체질적으로 어려움. 최소 5년간 성과도 안나오는 내부투자를 과감히 해야함. 무모할 수 있지만 이런 영역으로 문화행정을 확대하지 않으면 광주 문화의 혁신은 어려움. 시청에 '국비확보 000억'이라는 대형 현수막보다 '민간자본 000억 유치'와 '광주문화예술시장 매출액 0000억 달성'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기대함.

- 광주3차 폴리에서 네덜란드 창의산업기금에서 4000유로 펀딩을 받은 것은 혁신적인 결과라 판단됨. 이는 지속적으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쳤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적 자산은 향후 광주 문화행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4. 휴식년제 도입은 불가피했지만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 문예기금의 고갈로 문화예술지원금액의 축소에 대비하여 휴식년제를 도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논쟁은 있겠지만 당장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다만,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나 지원 중단 등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는 방식은 순번에 의한 나눠먹기로 오해할 수도 있음.
- 문예기금 문제는 중앙정부조차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 정도로 해법을 찾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장기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함. 좋은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투명한 행정과 신뢰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민선 5기의 정책 중 계승 발전시킨 점도 긍정적

-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면 이전 단체장의 색깔 빼기부터 들어감. 특히 전임 단체장의 대표 정책일수록 흔적 지우기에 가까울 정도로 분위기가 경색됨.
- 민선 5기의 대표 정책 중 '광주폴리'가 있음. 1차 폴리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겨우겨우 광주만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음. 민선 6기에 들어 광주폴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광주만의 폴리를 정의하고 절차와 내용까지 정립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음.

- 최근 들어 공공예술에 대한 혈세 낭비 논란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폴리와 관련된 문화행정은 전국에서 보고배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6.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그래서 더 아쉬운 <세월오월>

- 광주시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광주비엔날레가 있음. 20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성과 역시 만만치 않았음. 도약의 길로 접어들고자 스스로 마련했던 20주년의 기회를 <세월오월>이라는 작품으로 위기를 맞게되었음.
-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과 함께 문체부의 압력이 드러나면서 지자체의 불가항력에 대한 동정론이 생겨났지만, 이는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광주시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아이러니 하게도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러저러한 내홍을 겪으면서 행정적 측면에서 많이 악화된 반면, <세월오월>을 내린 광주비엔날레는 이사회와 구조 개혁과 대표 선임, 혁신 과제 도출 등 병폐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음. 자칫 중앙정부에 순응하는 지역문화예술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역 내에 축적된 역량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음.
- 한편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대한민국 영화인들이 앞장서 대한민국 영화계의 문제가 되었으나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대한민국 미술계의 문제로 부각되지 못한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완전한 독립과 혁신은 여전히 지역 내에서 의문이 존재함. 비엔날레재단 내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광주시와 비엔날레재단 간, 아울러 광주시와 문화재단 간의 관계 설정 문제는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과 현황

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 서문

- 광주광역시의 2017년도 문화정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핵심 엔진으로 '꿈꾸는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의 문화관련 공약은 '문화민주주의 선도 도시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인 창작지원, 생활체육 부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포괄적 내용에 끼워 넣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은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구축이란 단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의 15개 유형의 장애인을 총칭하는 단어이며, 일시적인 질병 및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사실 문화란 단어는 정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으며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정적인 의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원으로 보면 문화(Culture)는 서양에서 경작한다(cultivate)는 의미로부터 시작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활 곧 원시생활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농경생활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변화와 창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는 문화를 '세상에서 사고되어지고 말해지는 최고의 것'이라고 정의했고 문화는 '우리의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고 하겠다.

I.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는 쉽게 말해 문화와 복지의 복합어이다. 문화와 복지의 개념이 다양하듯이 문화복지의 개념 또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화복지란 문화소외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수준있는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서비스'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문화는 인간 삶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인류의 창조적 표현과 경험으로 구

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을 영위하되 좀 더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생활(영역)의 권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요건과 도구가 된다.

문화복지의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 인프라(infra)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 소외계층'이 대상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 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문화취약계층 유형 구분[자료 : 정무성 외]

구 분	문화취약계층 유형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재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취약계층	농어촌, 도서(섬), 산간 벽지 및 공단 지역 주민 등
복합적 취약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지리적 취약계층, 복합적 취약계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속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문화적으로는 복합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II. 장애인의 문화권리

UN에서 문화란 인간의 기본권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제약 없이 누구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등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복지를 넘어선 중요한 권리이다. 장애인이 차별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문

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나아가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의 원동력이 된다.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정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에 눈길을 돌리면서 장애인문화 예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문화바우처사업,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문화권 신장의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 표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까지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의 실천이 더욱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는 지금보다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아울러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Ⅲ. 장애인 문화복지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없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예술인 복지를 외면하고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올바른 장애인예술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책 운영에서도 장애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나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임원에 장애예술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방귀희)

이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제도적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조례로 공포된 「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및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향후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센터 건립 등 주요한 사항이 산적해 있음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장애예술인의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제작비 지원(43.5%), 창작공간 지원(32.3%), 교육훈련 지원(10.8%)의 순으로 많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장애인의 문화복지 실태결과를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장애인들이 57.2%가 평소 여가와 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냐고 질문에 답은 가장 높은 순위는 23.2%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음악감상/노래부르기/악기연주"가 10%, "독서/글쓰기"가 9.3%, "운동/등산/낚시"가 7.8%, "여행"이 6%, "장기/바둑"이 5.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은 실제 일상에서의 여가활동은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등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이 앞으로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50.8%)이며, 다음으로는 '운동/등산/낚시'(30.3%)였으며, 이외에 '컴퓨터 통신이나 오락'(20.0%), '독서/글쓰기'(16.4%), '음악감상/노래부르기/악기연주'(16%), '문화강좌/강습회 참여'(12.3%)등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이 누리는 문화복지의 실태와 욕구는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IV. 장애인 문화복지의 필요성

장애인의 문화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은 거의 모든 연구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혜택은 국.공립 공원이나 바우처를 통한 무료입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문화적 삶에 대하여 욕구를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하여 소홀했던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공공정책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경제적·사회적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영역에서도 이들의 참여는 매우 취약하며 문화활동 자체에 대한 수요나 욕구조차 일반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으로서 창작과 전시활동의 기회가 현저히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발표 기회의 확대와 창작공간 지원 그리고 제작비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전시와 공연의 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 창작물이 전시되고 공연될 기회 또한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각종 문화예술 작품전시회, 공연 등에 관한 감상의 기회가 더욱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더 많은 지원과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V. 맺으며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서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향유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 가치의 향유와 보장이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의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권 향유 보장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장애인이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며, 문화활동에서 참여기회 확대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 및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권의 보장과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문화권을 향유하기에는 많은 장애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 향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벽, 문화작품과 시설 및 정보 등에서의 접근의 장벽, 편견과 인식의 장벽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즉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고 배려가 요구된다.

인간은 먹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곧 행복하고 품격 있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하다는 것은 소득이 올라간다고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문화복지는 개개인이 향유할 권리이자 국가의 엄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민선6기 문화정책과 사업 중 '청년문화'에 대한 토론

정 두 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사업 중에서도 '청년문화'에 포커스를 맞춰 토론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평가는?

2016년 광주시에서 청년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광주시 청년문화정책의 행사성, 일회성 사업의 한계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다양한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광주시 청년문화정책의 비전, 미션, 로드맵 등을 도출하기 위한 '광주 청년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을 시에 제안하였고, 올해 광주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언급한 청년문화실태 조사결과 시사점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독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론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광주는 청년의 문화행사 참여가 활발하고 청년이 존중되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정토론문을 작성 하셨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래 청년문화실태조사 설문문항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 '광주는 청년이 존중받는 도시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라는 입장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하면 29%에 불과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 '광주는 청년의 문화행사 참여가 활발한 도시이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입장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하면 37.8%에 그칩니다.

- '광주는 청년 대상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이다'라는 문항도 '보통'이라는 입장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하면 37.4%에 그칩니다.

- '광주의 청년 문화는 힘든 일상의 위로가 된다' 또한 '보통'이라는 입장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하면 28.3%에 불과합니다.

- '광주는 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가진 도시이다'라는 문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이라는 입장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하면 30.6%에 불과합니다.

요약하자면 광주 청년 10명 중에 그저 2~3명이 위 문항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며, 심지어 이 수치도 청년들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고 심층 면접한 FGI 결과 과대 계상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특성상 잘 모르는 사안, 무관심한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광주의 청년문화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없다'라는 입장이 81.9%로 아주 높게 나타난 점입니다. (* '있다', '없다'의 이질성 다 질문이라 신빙성 높음)

청년문화정책의 관점은 '수혜'나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계

한 마디로 말해 광주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만족도는 사안에 따라 아주 낮거나 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화실태조사의 설문조사와 FGI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에서 몇 년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청년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문제 분석, 제대로 된 방향 설정,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을 위한 '수혜'나 '복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시가 발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힘이 갈수록 중요해지며 이를 뒷받침하는 '청년들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삶 디자인으로서의 생활문화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자산'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 청년들의 원하는 청년문화정책의 1순위?

청년들의 욕구조사 등 의견수렴을 하면 무조건 1순위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 중 공간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시아문화전당권 융합형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10월 '청년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광주시립미술관이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우선 청년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보편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생활권과 가까운', '저녁 시간, 주말에 운영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없다는 점은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광주 청년 문화정책 1순위는 이 부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화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정토론자에 대한 질의

1. 우선 위에서 공통적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 청년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광주의 청년문화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청년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문제 분석, 제대로 된 방향 설정,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선 6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설정되었던 '문화민주주의 관점의 거버넌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문화와 창조성은 예술가와 혁신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정책은 환경을 조성할 뿐 창조성을 만들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가, 문화기획자, 행정, 시민이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인정하고 협력과 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일회성의 거버넌스 방식'이거나 단순히 자문 받고 상담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거버넌스 방식'이거나 관에서

의도된 범위의 참여만을 진행하는 '폐쇄적인 또는 좁은 범위의 거버넌스 방식'입니다. 박경섭 발표자님은 '문화 관련 거버넌스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해서 시민 참여 활성화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거버넌스가 단순히 의견 청취 및 사업 정당화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 프로세스와 결합되어야 함' 이라고 발표하셨는데 무척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정토론자 두 분께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며, 박경섭 발표자님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광주시에는 2016년 광주시에서 구성한 청년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에도 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에 광주인구 40만 명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했던 보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청년문화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제안과 토론들은 12월 21일 광주시, 광주 문화재단, 상상실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광주 청년문화 포럼'에서 다뤄질 예정이므로 토론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 합니다.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주제들

보편 청년	전업 청년문화예술인(기획자,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디자인으로서의 생활문화정책 ▷ 저녁/주말 시간 문화프로그램 ▷ 연속성이 보장된 시민향유 프로그램 ▷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 ▷ 생활권과 가까운 청년문화공간 ▷ 동아리 정책 ▷ 홍보 방식의 혁신 ▷ 여행 프로그램 ▷ 일반시민 지속적 의견 수렴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정당한 인건비 책정 ▷ 문화예술인 공공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인 지원&복지 ▷ 문화예술인 공간 ▷ 문화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인 교류/네트워크 ▷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화예술인 자격증 ▷ 광주문화예술마켓 ▷ 콜라보 지원 사업(예술 장르간 융복합) ▷ 단계별 지원책(씨앗, 성기, 성숙기 등) ▷ 민관 거버넌스

민선6기 광주문화정책에 대한 생각

-공연예술가로서의 체감-

원 광 연 (광주연극협회 부지회장)

“문화는 그리할 진데, 예술은 그러하지 않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 :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예술의 사전적 의미 :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광주문화정책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광주예술계에 종사하는 한명의 예술인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1. 민선6기 광주문화정책과 현장예술가

○ 민선6기 광주문화정책

발표자, 지정토론자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민선6기 광주문화정책은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가 미래의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20세기말 김대중 전대통령 때부터 떠들어 왔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문화향유권에 대한 담론이 나오고 이것이 불특정다수에게 문화향유증진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시민중심의 문화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 같다. 이는 어쩌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방침의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소외계층, 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지역연계, 지역 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시민 전반 불특정다수에게 똑같은 문화혜택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변했다.

○ 현장예술가들이 느끼는 문화정책의 변화

군부정권시절 관공서에서 배급하듯이 나눠주는 예술창작지원금은 금액이 너무 작아 작품제작의 비용 대부분을 고스란히 예술가들이 고통분담을 해 왔다. 한 끼 밥도 못 먹고 불법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던 시절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난 문화예술지원으로 한때 문화예술계가 봄바람을 느끼며 활발한 창작활동과 문화소외대상에 문화예술을 참여향유하게 하여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헌데 이명박 정부 이후 기초예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을 긴축하고 기존의 예산도 세금으로 주어진 문화기회비용을 전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추어 예술동우회나 향유비용제공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예술창작을 하는 전업 예술가들에게는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진 듯 느낌을 주었다.

2.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현재 광주

○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문화인가? 무상 문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인가?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 상업적인 빅 공연물이 아니고서는 돈을 내고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또는 문화재단이 무료공연이나 문화행사를 쉴 새 없이 열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과 합작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을 돈 주고 사와서 무료 또는 헐값에 보여준다. 정말 나도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다.

○ 빈껍데기뿐인 문화중심도시

문화향유자가 늘어나고 향유수준이 높아가 진정한 문화시민이 되어가는 광주시민들과 더 이상 광주라는 토향에서 자생할 수 없는 순수예술가. 광주는 더 이상 순수예술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생산해 낼 수 없는 무정자증의 문화중심소비도시로 변해 갈 것이다.

3. 현장예술가는 궁금하다.

○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정말 이대로 좋은가?

제발 세계의 명문 프린지 페스티벌과 비교하지 말아 달라. 노는 것도 문화라면 문화행사 맞다. 그게 목적이라면 독일의 맥주축제나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같은 걸 하자! 회당 3~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상업적인 기획회사의 이번에는 어떻게 놀아볼까에 쓰는 것이 맞는 걸까? 금남로를 막고 아마추어 동아리단체와 청년들을 동원해서 도시소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진짜 그게 아니라면 양질의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조그만 발걸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명문 프린지처럼 지정 콘텐츠가 아닌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이 지역과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세계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순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주는 데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액수의 문제나 지원단체의 수의 문제가 아닌 진정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 의심이 든다. 균등의 논리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현장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예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시행한 휴식년제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지원하고자 반복 수혜단체에게 핸디캡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민주주의의 문화지원방식인가 싶다. 정작 문제는 수준 미달 단체가 다년간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그 선정 배경을 모두에게 공개해서 그런 의심과 불합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1년 쉬면 다시 4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식인가 의문이다. 이는 단편적인 예이고 사실 공모에서 지원, 정산 전 과정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술 발전을 위해 현장예술가들을 위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원주체에서 문화행사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예술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현장예술가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문화인력들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인건비 책정 기준마련

이 정 현 ((주)툴아이피 1%공작소 대표이사)

최근 몇 년간 시민들의 관심을 문화적으로 이끌어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정치, 정책, 캠페인, 포럼, 공청회, 교육, 마을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문화기획자를 비롯한 예술가, 청년, 여러 창작자들이 만나고 일하는 현장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반증하듯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한 젊은청년 문화인력들이 양성되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구의 커뮤니티 센터 및 마을단위에서도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하여 문화기획자 및 창작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활발한 문화기획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현장에서 문화기획자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소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현장을 운영하는 소비주체일뿐이라는 것이다. 문화인력들 중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기획자, 혹은 예술가라는 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행되는 예산의 성격(민간경상보조)상 인건비가 책정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 또 문화기획, 예술창작이라는 지적과업이 학술용역비나 강사료와 같은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경력을 증빙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젊은 청년이었을 경우, 사업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협력자도 되지 못하고 자원봉사수준의 처우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관련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박사의 <2015년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청년문화기획자 육성방안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청년문화기획자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력인증 방식이 객관

화 되어 있지 않고 보수를 책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인력의 경력증빙 부분과 보수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경력인증을 위해 문화기획자 인력 DB구축을 통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경력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기획자의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현장에 있는 프리랜서 문화기획자 및 창작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로써 문화기획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 아젠다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문화인력들의 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문화현장에서 문화인력들이 지식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선행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지적노동에 문제로써 문화인력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경력 및 사업처를 가지지 않고 지적노동을 하는 여러 계층의 노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지난 주 상상실현 네트워크에서는 광주의 청년 문화단체(회사) 30개 단체의 뜻을 모아 광주광역시에 문화인력의 정당한 인건비 책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내고 문화기관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에 정당한 인건비 근거기준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문화인력들의 정당한 인건비 책정을 위한 정량적 경력 및 인건비(기획 및 예술가의 창작비용에 대한 시간에 따른 지적노동비용)에 근거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인력의 기획 및 창작활동에 대한 지적노동업무에 대한 인력구성 및 직무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근로자의 과업기준도 필요하다. 이에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사료책정기준, 학술용역 지급기준 등을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문화인력의 인건비 책정기준으로 적확하지는 않지만 강사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직급과 경력에 따른 강의시간 및 초과시간, 강사원고료에 대한 근거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단기로 진행되는 강연이라는 지적과업의 인건비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

구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특강사	전직 장관(급) / 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직 차관(급)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가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학술용역에서의 인건비 기준은 연구원의 소지학위와 직급에 따라 구분이 되며 과업의 기준 임금규정에 따른 참여율을 %로 계상하여 책정할 수 있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 <개정 2016.12.30.>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1.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학술연구용역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기획자양성과정을 수료한 프리랜서 문화기획자들의 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Man-month 지급기준에 대한 근거이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르면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이 근거를 참고하면 일반적인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한 달 동안 온전히 투입되어 일한 인건비책정기준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간에 따른 대한민국 평균임금기준, 최저임금기준에 따른 인건비책정과 기획원가기준에 따른 창작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근거자료는 다양하다. 사실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는 문화인력들의 지적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인식이 부재하고서는 어떠한 근거도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경쟁있는 창작컨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문화인력들의 창작활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그들의 경제적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으로 존중받고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의>

광주시: 토론문에서도 언급한바 문화현장의 창작활동 생태계구축이 잘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 차원에서 광주의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서 활성화 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광주 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이 지역내 다양한 문화인력의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과 역점을 두고 계시는 과제가 있으신지? 예를 들면 메세나 정책이 있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의 소규모 펀딩보다 기업에 대규모 투자금이 매칭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7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7년 12월 20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7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